

경제학에 대한 10가지 거짓말

Ten Great Economic Myths

Murray N. Rothbard*

번역: 김경훈 연구원 (미세스 코리아)

1 인플레이션	2
2 정부적자의 구축효과	3
3 정부적자와 세금인상	5
4 중앙은행의 통화공급	6
5 경제학의 미래 예측	7
6 필립스 곡선	8
7 디플레이션	10
8 평준화된 소득세	11
9 래퍼 곡선	12
10 국제무역과 국내실업	13

*머레이 뉴턴 라스바드는 매우 지적이고 박학다식한 학자였으며, 주로 경제학, 정치 철학, 경제사, 그리고 법학에 중대한 공헌을 남겼다. 그는 루트비히 폰 미세스의 저술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을 개발하고 확장하였다.

중대사안에 대한 여론을 왜곡하고, 불건전하며 위험한 정부정책을 대중이 받아들여게끔 만드는 경제학의 신화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신화들 중 가장 위험한 10가지를 나열하고, 왜 문제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신화 1 : “정부적자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혹은, “정부적자는 인플레이션과 아무 관련이 없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우리는 항상 정부적자와 함께해왔다. 집권하지 못한 정치인들은 언제나, 보수이던 진보이던 관계없이, 적자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비난해왔다. 이러한 비난에 맞서 권력을 가진 집권층은 적자가 인플레이션과 무관하다고 변함없이 대응해왔다. 그가 보수이던 진보이던 관계없이 말이다. 이 두 진술은 명백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마치 진실인 것 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놀랍게도 둘 다 거짓이자 신화에 불과하다.

적자란 무엇인가?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적자는 두 방법으로 형성된다. 첫째, 국채를 사람들에게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러한 적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데, 새로운 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단지 국채를 매입할 뿐이고,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국채를 판 만큼에 한정된다. 간단히 말해 돈의 소유권이 사람들에게서 정부로 옮겨졌으며, 정부는 그 돈을 다시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는다.

둘째 방법은 제도권 은행에 채권을 파는 것이다. 이 경우 은행들은 새로운 은행예금을 만드는 방식으로 채권을 매입한다. 즉 말 그대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돈’이 창출된다. 정부가 은행예금의 형태로 창출된 새로운 돈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돈이 기존 경제의 소비 흐름에 영구적으로 한다. 그렇게 가격이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중앙은행은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 은행들이 보유적립금의 10배에 육박하는 새로운 자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만약 은행들이 적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될 100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한다면, 중앙은행은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오래된 국채를 갚는다. 이러한

매입은 은행의 적립금을 100억 달러 증가시키는데, 이 새로운 적립금을 바탕으로 은행은 1000억 달러 수준의 새로운 돈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정부와 제도권 은행은 정부적자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돈을 사실상 ‘인쇄’한다.

요컨대 제도권 은행에 의해 조달되는 적자는 인플레이션에 해당하지만, 보통 사람들에 의해 조달되는 적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

정부정책 책임자들은, 적자가 가속화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던 1982-83년 미국의 사례를 적자와 인플레이션이 서로 무관하다는 통계적 ‘증거’로 인용하곤 하는데, 이것은 전혀 증거로 작용할 수 없다. 일반적인 가격 변화는 화폐의 공급과 수요라는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1982-83년 동안 미국 중앙은행(연준)은 연 15%의 매우 높은 금리로 새로운 화폐를 창출하여 정부적자를 늘리는 데 사용하였다. 동시에, 그 2년 동안 심각한 경기침체가 있었으며, 사업손실에 대응하여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즉, 상품을 구매하는 데 돈을 사용하려는 욕구가 낮아졌다.) 이러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화폐수요가 상쇄되었을 뿐이며, 적자가 인플레이션과 무관하다고 설명할 수는 없는 법이다. 사실,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소비가 살아난다면, 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새로운 화폐의 소비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다.

신화 2 : 정부적자는 민간투자에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일으키지 않는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의 낮은 저축률과 투자율에 대해 많은 납득할 만한 우려가 있었다. 즉 엄청난 정부적자 때문에 결국 우리의 저축이 비생산적인 정부지출을 지탱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고, 따라서 생산적 투자, 산출, 심지어 대중의 생활수준 향상 및 유지에 있어 더 심각한 장기적 문제가 야기되리라는 예측이다.

정부정책 책임자들은 다시 한번 통계로 이 의혹을 반박하고자 시도했다. 상술한 신화에서와 같이 1982-83년의 사례를 인용하며, 그들은 이 기간 동안 적자가 더 많이 증가했지만 이자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적자는 구축효과를

날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러한 주장은 통계로 논리를 반박하려는 오류를 다시 보여줄 뿐이다. 경기침체 기간에 사업 차입이 줄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했다. 그러나 ‘실질’ 금리(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우리 대부분은 구축효과의 영향으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재개되리라 예상한다. 여하튼 통계는 논리를 반박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따져 본다면, 저축이 국채를 지탱하는 사용처로 전환된다면, 그것은 만약 적자가 없었을 경우 생산적 투자에 사용가능했던 저축의 소멸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자율이 적자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아지리라 말할 수 있다. 만약 적자가 국민에 의해 지탱된다면, 저축을 정부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은 직접적이고 명백한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만약 적자가 은행 인플레이션에 의해 지탱된다면, 그 전환은 간접적 효과, 즉 정부가 새롭게 ‘인쇄한’ 돈과 대중이 오랫동안 절약한 돈이 자원의 획득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킨다.

밀턴 프리드먼은 단순히 적자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지출 역시 민간 저축 및 투자를 구축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적자의 구축효과를 반박하려 한다. 물론 세금으로 빼돌린 돈 역시 민간 저축과 투자에 사용될 수 있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적자는 일반적인 정부지출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데, 대중에 의해 조달된 적자가 오직 저축만을 도용하는 반면, 세금은 저축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비 역시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적자는, 언제나 중대한 경제적 문제의 원인이다. 만약 적자가 제도권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받는다면,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나 그것이 대중의 자금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생산적인 민간투자에서 사용될 수 있었던 저축금을 낭비적인 정부사업으로 전환시키면서 극심한 구축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 및 적자가 야기하는 높은 이자율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면, 적자가 클 수록, 국민들은 치솟는 이자 납입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소득세를 영구적으로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신화 3 : 세금 인상은 정부적자의 치료법이다

정부적자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걱정하는 사람들마저도, 안타깝게도 용납할 수 없는 해결책인 세금 인상을 제안하곤 한다. 세금을 올려 정부적자를 치료하는 것은, 기관지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람의 목에 총을 쏘는 것과 같다. 그러한 ‘치료’는 병보다 훨씬 더 나쁘다.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많은 비판자들이 지적했듯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저 정부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치인과 관료들은 더 많아진 세금에 대응해 지출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영국의 경영학자 시릴 파킨슨(Cyril Parkinson)이 그의 유명한 ‘법(Law)’에서 한 말을 인용해보자: **“지출은 수익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만약 정부가 20% 수준의 적자예산을 가지기 원한다면, 동일한 적자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늘어난 세입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심리학적 판단은 빈틈이 없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우리는 세금이 더 높은 가격보다 낮다고 믿을 이유도 없다. 인플레이션이 일종의 과세 라는 것은 사실이다.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정부 혹은 정부와 밀접하여 새롭게 창출된 돈을 빨리 수취할 수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 과정의 앞에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과정 상 새로운 돈을 뒤늦게 손에 쥐는 대중을 갈취할 수 있다. 우리는 적어도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교환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빵 한 덩어리의 가격이 10달러 까지 오른다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지만, 어찌되었던 적어도 빵을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세금 인상은, 당신의 돈이 오직 정치인과 관료들의 이익만을 위해 몰수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당신은 어떠한 서비스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세금인상의 유일한 결과는, 생산자의 돈이 관료에게 몰수되었다는 것이다. 그 돈은 대체로 관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며, 부분적으로는 대중을 압박하고 피해를 끼치려는 모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정부적자를 해결할 건전한 치료법은 간단하다. 그러나 사실상 언급된 적이 없다. 정부의 예산을 삭감한다면 적자를 치료할 수 있다. 어떻게, 어느 영역의 예산을 삭감해야 할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모든 예산을 삭감하자.

신화 4 :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축소하면 금리가 상승(또는 하락)한다” 혹은 “확대하면 상승(또는 하락)한다”

경제 언론사들은, 매의 눈을 가지고 매 주 통화 공급 수치를 관찰한다. 그들은 경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대체로 그들은 경제적 수치를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해석한다. 만약 통화 공급이 증가할 경우, 일부 언론사는 금리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리라 해석한다. 그러나 동시에 통화 공급의 증가를 금리의 인상으로 해석하는 기사도 존재한다. 반대의 경우도 상황은 같다. 중앙은행이 통화 팽창을 긴축한다면, 금리 인상 혹은 인하를 예측하는 상반되는 견해들이 동시에 등장한다. 모든 중앙은행의 행동이 아무리 모순되더라도 결국 금리 인상으로 귀결된다고 말하는건가? 분명 이러한 사태는 매우 잘못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물가 수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율 역시 여러 방향에서 작용하는 몇 가지 인과관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있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확대하면, 더 많은 은행 적립금이 창출되며, 그에 따라 은행 신용과 예금의 공급 역시 확대된다. 신용의 확대는 반드시 신용시장의 공급 증가를 의미하며, 따라서 신용가격, 즉 이자율의 하락을 유도한다. 반면에, 중앙은행이 신용 공급과 통화 공급의 증대에 제한을 건다면, 이는 신용시장의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자율의 상승을 유도한다.

“중앙은행의 팽창은 이자율을 낮추며, 긴축정책은 올린다”는 현상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의 첫 10 20년 사이에만 일어난다. 그 기간이 지나면, 대중과 시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시작한다. 즉, 그들은 통화 공급의 체계적 팽창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만성적이 되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 역시 알아차린다. 다시 말해, 만약 누군가 1년간 5%의 금리로 대출을 하고, 그 해에 7%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본다. 구매력이 7%이 줄어든 달러로 환급받기 때문에 그는 2%를 잃는다. 이에 상응하여 채무자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이득을 취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따라 잡기 위해 이자율에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을 매기는 경우에만 대출을 해준다. 요컨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부채질하는 것은 이자율의 인플레이션율을 높이며, 그러한 기대를 꺾을 수 있는 요소는 인플레이션율을 낮춘다. 이런 점에서는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추고 이자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이런 경우 확장정책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듯 정반대의 인과사슬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한다. 어떤 인과관계가 더 강한가에 따라, 중앙은행의 팽창정책과 긴축정책 모두 이자율은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인과관계가 더 강한지는 확실하게 알 길이 없다. 인플레이션 초기 수십 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 없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강도와 반응에 걸리는 시간은 대중의 주관적 기대에 달려 있으며, 이것들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경제 예측이 결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신화 5 : 경제학자들은 도표와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여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우리는 이자율을 예측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예측이라는 행위의 ‘함정’을 파악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꺼려하는 성향을 가진다.¹⁾ 우리의 가치관, 사상, 기대, 지식은 항상 변화하고, 그러한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 예컨대, 1983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배추밭 아이들’ 인형이 엄청난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혹은 예측한) 경제학자가 있었는가? 모든 경제적 수량, 즉 가격 지수, 구매 지수, 소득 지수 따위는 수천의, 심지어 수백만 명 이상의 개인들이 행한 선

1) 역주: 이자율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은 우리가 경제현상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진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다. 만약 이자율을 예측할 수 있다면 테부자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그것에만 매달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멍청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택의 구현에 불과하다. 그러한 영역의 사전 예측은 물론 불가능하다.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상관 없이, 많은 연구는 경제학자들의 예측 기록에 의해 형성되었고, 그것들은 언제나 최악만을 보여주었다. 기상학자들은 종종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는 한 충분히 일기예보를 잘할 수 있으리라 불평하곤 한다. 그들에게 어려운 것이란 추세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를 가지고 가까운 미래를 추론해내는 묘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현재의 추세의 지속을 가정하는 한, 그들은 정교한 컴퓨터가 필요하지도 않다. 자를 비롯한 기초적인 도구만을 사용해서도, 훨씬 더 싸고 훌륭하게 일기예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예측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미래 시점에 어떻게 변할지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려는 학자들은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무능한 것으로 악명높다. 1981-82년 기간의 경제침체의 깊이가 어느정도인지 예측한 경제학자는 전무했고, 1983년의 호황이 어느 정도의 강세를 가질 것인지 역시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만약 다음에 당신이 경제학 전문용어에 휘둘리거나, 경제 예측가의 전문 지식과 씨름하게 될 때, 스스로 한 번 이 질문을 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만약 그가 미래를 그렇게 잘 예측할 수 있다면, 왜 그는 주식과 상품 시장에서 수조 달러를 벌 기회를 포기하고, 뉴스에 출연하거나 다른 사람을 컨설팅 해주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일까?

신화 6 :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누군가 정부에게 인플레이션 정책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때마다, 기득권 경제학자 및 정치인들은 만약 우리가 인플레이션 정책을 중단한다면 심각한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 경고한다. 즉 그들에 따르면 우리는 높은 실업률에 맞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거나, 인플레이션을 타파하는 대신 높은 실업률을 감당해야만 한다. 종종 우리는 이 두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말려들곤 한다.

이 교리는 케인스주의자들이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만들어 둔 대비책이

다. 원래 케인스주의자들은, 만약 우리가 적자와 정부 지출을 세밀하게 조정한다면, 인플레이션 없는 영구적인 번영과 완전 고용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리라 약속했다. 그러나, 자신감 넘치는 선언과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만성적이 되고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자,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새로운 화폐 팽창을 중단해야 한다는 압력에 맞서기 위해, 케인스주의자들은 상술한 ‘트레이드오프’를 경고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이 트레이드오프 교리는, 수십년 전 영국 경제학자 필립스(William Phillips)가 발명한 ‘립스 곡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필립스는 임금상승률과 실업률을 연관지으며, 이 두 개의 수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즉 임금상승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은 낮아진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독특한 교리는 논리적 상식과 극심하게 충돌한다. 진정한 ‘이론’은 임금이 높을수록 실업률도 더 높아지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만약 모든 사람이 고용주에게 가서 두 배 혹은 세 배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그들 중 상당수가 즉각적으로 실직할 것이다. 그러나, 논리와 충돌하는 이 기괴한 발명은 케인스주의 학계 기득권층에 의해 하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우리는 이 통계적 발견이, 논리적 이론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도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연간 1.2%에 불과했고, 실업률은 3.4%를 맴돌았지만, 1980년대의 실업률은 8.1%, 인플레이션은 5.1%에 이른다. 지난 20-30년 동안의 경향을 축약하자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모두 매우 심각한 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필립스 역곡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는 존재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케인스주의를 ‘이념’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은 좀처럼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한다. 그들이 경제학 이론은 언제나 사실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모순이다. 자신들의 실패한 개념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필립스 곡선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실업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단순하게 고집하기로 결정했다. 이

곡선과 모순된다고 간주되는 현상은,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모델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변동’된 것에 불과하다는 예외사항을 두고 말이다.

사실, 우리가 케인스주의 주장에 따라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임금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줄인다 하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더 많은 실업을 창출하게 될 뿐이다. 그러한 조치는 실질 임금률을 낮추는 눈속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침내 임금률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것이고, 그 여파로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인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을 야기할 것이다. 케인스는 자신의 비판에 대응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죽는다”**고 말했다. 20여 년 간 인플레이션이 지속된 끝에,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장기간’ 속에 살고 있다.

신화 7 : 디플레이션 - 가격 하락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엄청난 불황을 초래할 것이다

대중의 기억력은 짧다. 우리는 18세기 중반의 초기 산업혁명 부터 제2차 세계 대전이 개전할 때 까지 매년 물가 하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자유시장에서 생산성과 재화의 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판매가격과 함께 생산비용 역시 하락하기 때문에 경기침체는 없다. 생활비가 하락하는 동시에, 임금률은 대개 일정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실질’ 임금은 평균적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그 두 세기에 걸쳐 미국에서 물가가 오른 시기는 오직 전쟁 기간(1812년 전쟁, 남북전쟁, 제1차 세계 대전)뿐 이었는데, 정부가 전쟁 비용의 지불을 위해 화폐 공급에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생산성의 계속되는 향상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 혹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받지 않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작동원리를, 지난 몇 년간 컴퓨터 가격에서 일어났던 일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컴퓨터 한 개를 구입하는 데 수백만 달러가 필요했다. 그러나 마이크로칩 혁명이 가져온 놀라운 생산성 증가 덕분에,

컴퓨터의 가격은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증가했기 때문에, 컴퓨터 회사들은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성공적인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산비용과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덕분에,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역동적인 성장은 대중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디플레이션’은 컴퓨터 산업에 어떤 재앙도 가져오지 않았다.

전자계산기, 플라스틱, TV, VCR 등 고도로 성장하는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다. 디플레이션은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의 특징이다.

신화 8 : 가장 좋은 세금은 (어떠한 면세 혹은 공제 없이 전체 소득에 비례하는) ‘평균화된’ 소득세(flat income tax)이다

소득의 수준에만 비례하는 단일 소득세만을 허용하고, 그 외 다른 모든 세금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금공제를 완전히 없앤다면 전체적인 세율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현행 소득공제를 일종의 부도덕한 보조금,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폐지되어야 하는 ‘허점’이라고 가정한다. 오직 정부가 모든 사람의 수입을 100% 소유하며, 그 수입 일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이 짜증나는 ‘허점’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만 세금의 면제 혹은 공제는 ‘허점’에 해당한다. 만약 우리의 수입이 정부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면,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 일부를 보유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허점’도 ‘보조금’도 아니다. 의료보험, 이차지불금, 무보험손실 등에 대한 공제를 폐지하여 종합적인 세금을 낮추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한 다발의 세금을 낮추는 것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일단 면제와 공제가 성공적으로 폐지될 경우에, 정부가 세율을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사실 그럴 가능성도 전무하다. 과거든 현재든 정부의 기록을 본다면, 반대로 정부가 세금공제를 폐지하고 그에 비례하여 전체적인 세율을 낮게 조정하지 않고, (최소한) 예전

과 같은 수준의 돈을 가져가리라 가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세금공제만 폐지되고 감세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로부터 관료에게 더 많은 세금이 유출되리라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조세 제도는 대체로 시장 가격 혹은 수입에 부과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시장 가격은 특정 개인의 수입에 비례하지 않는다. 예시를 한번 살펴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괴상할지 유추해볼 수 있다. 만약 록펠러가 보통 사람의 수입에 비례하여 빵 한 덩어리에 천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세계가 있다면, 그러한 세계는 소득의 평등이 매우 괴상하고 두드러지게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는 세계라 말할 수 있다. 만약 조세 제도를 시장 가격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세금은 각 개인의 수입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신화 9 : 세율이 낮아지면 세수는 더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세 인하는 납세자는 물론이고 정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캘리포니아의 아서 래퍼(Arthur Laffer)가 제시한 ‘래퍼 곡선’²⁾이 이런 주장의 대표적인 근거이다. 래퍼 곡선에 따르면, 정부 지출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세금을 낮추면서도, 균형 예산을 달성할 방도가 있다. 만약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은 감세의 혜택을 누리고, 정부는 예전과 동등한 세수를 취하면서도 균형 예산을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세율이 99%인 상황에서 95%로 낮아지면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역학이 모든 사안에 적용된다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사실, 이 역학관계는 국가소득세보다 지방소비세에서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한다. 몇 년 전 워싱턴 D.C. 지방정부는 워싱턴시의 휘발유세를 대폭 인상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훨씬 더

2) 역주: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일정 세율인 최적세부담율을 초과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 즉 근로의욕 감퇴 등의 원인으로 세원 자체가 줄어들게 됨.

싼 가격에 기름을 채우고자 근처의 버지니아 혹은 메릴랜드의 주유소를 방문했으며, 워싱턴시의 휘발유세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많은 원통함과 혼란만을 남긴 채, 워싱턴 지방정부는 세금 인상을 취소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소득세에서 일어나리라 보긴 어렵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조금 오른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거나 나라를 떠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세금이 조금 내려간다는 이유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래퍼 곡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래퍼 교수는 곡선의 효과가 작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결코 명시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래퍼 교수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정부 세수의 극대화라고 가정한다는 점에 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래퍼 곡선의 최적조세점 위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세율을 ‘최적’까지만 낮추고 싶어해야 한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할까? 왜 정부 세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할까? 정부의 활동으로 빼돌려지는 민간 생산의 점유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싶어서 그래야 하는 걸까? 래퍼 교수의 가정과 반대로, 나는 우리 중 상당수가 래퍼 곡선의 최적점에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든 상관 없이, 세율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정부 세수를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제안하고 싶다.

신화 10 : 노동력이 싼 나라로부터의 수입은 우리나라의 실업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 교리는 정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사안은, **“왜 외국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낮는데, 미국에서의 임금은 높은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직면하는 임금률은 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왜 임금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인의 임금은 높은 수준이다. 미국 노동자들은 기술적으로 진보된 자본 설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다. 반면 다른 나라의 자본 설비는 규모가 작거나 기술적으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본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한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미국에 비해 낮다. 모든 국가의 임금률은 그 나라 노동자들의 전반적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높은 임금은 미국의 번영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현상태를 보여주는 번영의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저임금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의해 ‘불공정한’ 경쟁에 놓여 있다고 시끄럽게 불평하는 미국 내 특정 산업에 대해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 나라의 특정 산업, 직업, 그리고 지역별 임금은, 마찬가지로 같은 나라 내의 다른 산업, 직업, 그리고 지역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모든 노동자는 서로 경쟁한다. 만약 A 산업의 임금이 다른 산업보다 훨씬 낮다면,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젊은 노동자들은 A 산업을 떠나거나 거부하고, 임금이 더 높은 다른 회사나 산업에 취직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수입을 불평하는 특정 산업은, 미국 내 모든 산업 중에서, 시장에서 그리 선호받지 못하는 가장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임금 역시 시장의 수요를 이끌어내지 못할 정도로 높게 책정된 것이다. 미국의 제철업 혹은 섬유업 등이 해외의 경쟁업체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이유는, 외국 회사가 낮은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미국 산업들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미국의 임금률을 상승시킨 상황에서, 제철업과 섬유업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미국의 제철업과 섬유업은 다른 산업계에 비해서 노동력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회사 혹은 산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관세나 수입 쿼터는, 그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한 규제는 가격을 높게 유지하면서, 품질 상승과 경쟁을 억제하고, 생산을 왜곡함으로써 모든 미국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다. 관세 혹은 수입 쿼터는 철도를 폐쇄하거나 공항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그것들의 요점은 국제 무역을 인위적으로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세와 수입 쿼터가 미국 내 다른 효율적인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방법만이 아니다. 그것들은 더 효율적인 용도로 이동될 수 있었던 자원을 막는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관세와 수입 쿼터는 그것의 보호와 독점적

수혜를 받는 기업 혹은 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세와 수입 쿼터가 철도 혹은 공항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면, 정부 독점 하에 있는 산업은 너무 비효율적이 되어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방안은, 결국 자유경쟁으로부터 더 도피하기 위한 더 많은 특권, 즉 더 많은 정부지원을 수령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